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 목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날 짜 2024. 11. 21 (총4쪽)

< 보 도 자 료 >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 제천시·영동군·단양군 4등급 받아 -
- 충북도·증평군·음성군·괴산군, 2년 연속 공무원 1천 명당 징계 비율 증가 -
- 최근 10년 중 성(性) 비위 징계자 2023년이 가장 많아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15.8%나 돼 -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하락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 만족도도 낮아진다. 따라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청렴성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내 자치단체가 청렴성을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불문경고를 포함한 공무원 징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초 도내 각 지자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받았고, 이를 정리하였다. 2020년 이전 자료는 과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이다.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 진천군 1등급

제천시·영동군·단양군 도내 최하위 4등급 받아

지방선거 있었던 2022년 청렴도 하락한 곳은 충북도와 충주시, 영동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진천군이 1등급을 받았고, 음성군과 옥천군이 2등급을 받았다. 2023년은 최근 5년 중 도내에서 2등급 이상 받은 자치단체가 가장 적은 해였다(2019년 6곳, 2020년 4곳, 2021년 8곳, 2022년 5곳, 2023년 3곳).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은 2022년 대비 1단계씩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충북도를 포함해 나머지 시군은 모두 3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 충주시 증평군 보은군은 전년도 평가 대비 1등급씩 하락한 결과이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충북도는 2021년 1등급에서 두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고, 충주 시도 두 단계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영동군은 한 단계 하락해 3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년도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

2023년 불문경고를 포함한 도내 징계 공무원 95명, 공무원 1천 명당 6.8명

2023년 도내에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0명이며, 불문경고는 35명이다. 불문경고를 포함해 공무원 1천 명당 징계비율을 산출하면 6.8명이다.

도내 공무원 1천 명당 징계 비율이 도내 평균을 넘어서는 자치단체는 충북도(7.6명), 충주시(7.4명), 보은군(17.8명), 단양군(13.7명), 음성군(9.5명), 진천군(8.6명), 영동군(6.9명)이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 불문경고를 포함하여 공무원 1천 명당 징계비율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자치단체는 충북도(7.2명, ▲1.9명), 청주시(5.2명, ▲1.8명), 증평군(2.1명, ▲2.1명), 괴산군(4.1명, ▲1.2명), 음성군(5.3명, ▲0.9명)이다.

2023년까지 2년 연속 증가한 자치단체는 충북도,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이다.

징계의 76.8%가 경징계와 불문경고

2023년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징계가 40%(38건), 불문경고 36.8%(35건), 중징계 23.2%(22건)이다. 경징계가 가장 많았으며, 불문경고를 포함하면 전체 징계의 76.8%이다.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 비율은 제천시(100%), 영동군(100%), 보은군(91.7%), 충북도(86.7%), 청주시(77.8%) 순으로 높았다.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는 5년 전(2018년, 79.5%)에 비해 2.7% 감소했다.

중징계 비율은 증평군(66.7%), 진천군(42.9%), 단양군(44.4%), 음성군(33.3%), 충주시(27.3%), 괴산군(25%), 옥천군(25%) 순으로 높았다. 중징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특히 더 공직기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아직도 15.8%나 돼

증평군·괴산군·충주시, 5년 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증가

2023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징계 처분의 15.8%이며,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28.3%에 해당한다. 품위유지 위반 징계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였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없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괴산군(50%), 증평군(33.3%), 청주시(22.2%), 음성군(22.2%), 충주시(18.2%)이다.

2018년(27.9%)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25.6%(20명)로 증가하였고, 2023년 다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은 12.1% 감소하였다.

2018년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증평군(0명, 0% → 1명, 33%), 괴산군(1명, 16.7% → 2명, 50%), 충주시(0명, 0% → 2명, 18.2%)이다.

2023년, 2014년 이후 성(性) 관련 비위 가장 많아

2023년 도내 성(性) 관련 비위는 자료 확인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3년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는 1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명이 증가했다. 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4건(영동군 2건, 음성군, 1건, 괴산군 1건), 성폭력이 3건(음성군 2건, 옥천군 1건), 성희롱이 4건(단양군 3건, 청주시 1건)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성(性) 비위는 31건이며 이 중 54.8%, 17건이 청주시(6건), 단양군(6건), 영동군(5건)에서 발생했다.

2023년도 소청심사에서 44% 감경받아

2023년 충북도 소청 심사에서 44%(11건)가 감경 처분을 받았다. 소청을 제기한 징계 공무원 5명 중 2명은 감경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감경 처분율은 2019년 53.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7.7%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다시 증가했다. 감경 비율이 높아진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내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최근 4년 동안 1,359만 원 지급

도내에서 지난 4년간 19명에게 1,359만 원을 지급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급한 신고보상금이 5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보상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는 충북도(11명 5,177천 원), 청주시(4명, 2,431천 원), 진천군(3명, 4,194천 원), 괴산군(1명, 1,791천 원)이다.

청주시와 보은군은 공직비리 감시의 방편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충주시·진천군·보은군·단양군·옥천군, 공익신고 보호 제도 도입 안 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491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동 법을 근거로 많은 자치단체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 충북도를 포함 6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영동군은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 중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한 자치단체는 없다.

2019년 괴산군 조례 제정을 마지막으로 도내에서 제도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충주시 진천군 보은군 단양군 옥천군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도내 자치단체의 청렴성·청렴정책, 주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5년 중 1등급~2등급을 받은 자치단체 수가 가장 적고, 성(性) 관련 비위는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비율은 아직도 불문경고를 포함한 총징계의 15.8%에 이르고, 소청 심사 감경 처분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감소하다 다시 대폭 증가했다.

공직비리보상금 지급액은 증가(2015년~2019년 50만원, 2020년~2023년 1,116만원) 하였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은 2019년에 멈춰 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보호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곳은 없다.

청렴성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해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자,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다. 지방정부는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첫째, 자치단체장이 청렴성,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표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해야 한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와 추이, 해당 자치단체의 징계 현황 및 경향, 청렴 정책의 실행 정도 및 제도 보완,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 등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정도에 따라 공직사회는 변화할 수 있다.

둘째, 성(性) 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수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2023년 성(性) 관련 비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불문경고를 포함한 전체 징계의 15.8%나 된다.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거나, 적발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기관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을 강화하고 감수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셋째, 공직 비리 및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충주시와 보은군은 여전히 공직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또한 도내 5개 시군(충주시, 진천군, 보은군, 단양군, 옥천군)이 도입하지 않았고, 제도를 도입한 도내 자치단체 중 공익신고지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공직 부조리 및 공익 신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곳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직 부조리 신고나 공익신고제도는 부패, 부조리, 공익침해 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도, 투명한 지방정부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들이다. 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별첨 1. 도내 공무원 징계 현황 관련 표. 끝.